



# 농산어촌소멸 해법 찾을 워킹그룹 회의 개최

- 농산어촌 소멸 개념과 쟁점 논의 -

대통령소속 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(이하 농어업위, 위원장 장태평)는 지난 9월 1일(금)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 주재로 농산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제4차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하였다.

워킹그룹은 농어업위 농어촌분과위원(분과위원장 김창길) 중 농업·농촌, 보건·복지 등 위원으로 구성하여 농산어촌소멸 대응 의제 추진을 위한 실무 협의체이다.

이번 회의에서는 △농산어촌소멸 개념, △농산어촌소멸의 문제, △농산어촌 인구 문제의 현황과 전망, △농산어촌소멸 대응 과제 등을 논의하였다.

주제발표자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“지방과 농산어촌은 공간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기에 대체로 지방소멸이 곧 농산어촌소멸로 이해할 수 있다”라고 말하며, “그러나 특정 지자체에 인구의 공간적 쏠림 현상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농산어촌소멸의 문제는 지방소멸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”라고 강조했다.

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은 “농산어촌소멸은 인구 감소가 심화되어 공동체 기능이 약화되고, 농림어업 활동이 위축되며, 자연환경 관리가 소홀해짐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”라고 말하며, “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위에서 관련 정책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한편, 차기 회의에서는 △농산어촌소멸 대응 관련하여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, △농산어촌소멸 대응 관련기관의 대응 현황 파악 및 역할 검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.

붙임 ‘농산어촌소멸: 개념과 쟁점’ 주제 발표(요약) 1부. 끝.

담당 부서	농어촌정책팀	책임자	팀 장	엄성준 (02-6260-1221)
		담당자	사무관	임정우 (02-6260-1225)



□ 개요

- (개념) 농산어촌소멸은 농산어촌의 인구 감소가 심화되어 공동체 기능이 약화되고, 농림어업 활동이 위축되며, 자연환경 관리가 소홀해짐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
  - 지방과 농산어촌은 공간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기에 대체로 지방소멸이 곧 농산어촌소멸로 이해될 수 있음
  - 그러나 특정 지자체에서 인구의 공간적 쏠림 현상을 고려하면 농산어촌소멸의 문제는 지방소멸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(지방소멸 ≠ 농산어촌소멸)

□ ‘농산어촌소멸’은 왜 문제인가

- (문제) 수도권 인구 및 노동력 공급의 원천은 농산어촌이며, 농산어촌소멸의 문제는 국가 전체의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등 야기 가능
  - ①농산어촌의 인구 감소 → ②농산어촌 공동체 쇠퇴, ③유·무형 자원 계승 및 관리 소홀로 인한 공익적 기능 축소, ④농림어업 활동의 축소로 국민의 식량주권과 먹거리보장권 위협, ⑤농산어촌의 자체 생산 및 소비 기능 위축으로 농산어촌 서비스 수준 및 활력 저하, ⑥농산어촌의 소멸은 지방도시의 기능부담으로 이어져 사회적, 행정적 비용 유발, ⑦농산어촌의 경제, 정주, 휴양 활동의 다양성 축소로 인한 국민의 삶의 질 저하 유발

□ 농산어촌 인구 문제의 현황과 전망

- (인구 분포 및 구조 변화) 인구 및 경제활동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됨에 따라 농산어촌에서는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고령화 진행
  - 모든 농산어촌의 인구가 획일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, 지역별 혹은 특정 읍·면·동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음

- (새로운 트렌드) 베이비부머 연령층을 중심으로 인구이동 흐름 전환이 보이며, 일상적 통행 패턴 등 사회 트렌드 변화 양상을 보임
  - 인구 순유입 지방자치단체 비율 변화로 보았을 때 40대 중후반부터 60대 후반까지의 베이비부머 세대 다수가 포함된 연령층의 순유입 군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
  - 도시민의 귀농·귀촌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정주공간 및 경제 활동 공간에 대한 수요가 가능성을 시사

#### □ '농산어촌소멸' 대응 과제

- 국민 행복도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의 전환
- 농산어촌 삶의 질 제고 정책 확충
- 관계인구를 확충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도입